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9월 모의평가 ESSENTIAL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 6월 및 9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의 저작권은 '꽃 피고 봄 오면'에게 있습니다.
- 저자가 문제를 푸는 사고 흐름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청춘을 그려내자

생활과 윤리

WITH 'ORBI'

BLOSSOM ETHICS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②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 ③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 ④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번 문항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단원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 1. 갑,을 윤리학의 입장을 각각 묻는 문항
- 2. 나의 입장에서 상대(윤리학)의 입장이 무엇을 간과하는지 묻는 문항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2번 유형이 출제되었네요! 사실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워낙 난이도가 낮아서.)

그래도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문제 풀이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익숙함을 통한 자신감 형성)

문항을 푸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의 윤리학을 살펴봐야겠죠?

'규범'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실천적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기술 윤리학임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원래 출제 의도는, ㄱ 자리에 이론 규범 윤리학은 강조하고 기술 윤리학이 간과할 내용을 고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할 만한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을: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으로 목표를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좋음들 중에서 최고의 좋음으로 목표를 한다.

- ① 갑: 국가는 공동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② 갑: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 ③ 을: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 ④ 을: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⑤ 갑, 을: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문항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사상이 배치입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묻고 있는 사상은 로크이지만, 오답을 만드는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갑 사상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과는 거리가 있으니, 아마 사회 계약론 사상가일텐데,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보는 루소는 일단 아니겠죠? 그럼 홉스 아니면 로크일텐데, 재산 개념이 나왔으므로 로크입니다. (사실 '재산'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로크라고 골라내도 좋습니다.)

을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 좋음 ' 개념은 윤리와 사상에서도 최근에 종종 출제되고는 했습니다. 제시문의 내용 중 마지막 줄은 챙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최고의 좋음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EX. 가족과 국가가 추구하는 좋음의 가치는 같다. --> X 이런 방식으로요.)

핵심적인 몇몇 선지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 EBS 연계라고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해를 가한 외부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속은 불가능하겠죠?

3번 선지 : '정치적 동물'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에 따라 국가라는 상위 형태의 공동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지, 국가가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호 동의는 사회 계약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계약의 인위적인 성격과 본성의 자연적인 성격의 대비를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 기>
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ㄷ. 발화(發話)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항입니다. 하버마스쥬?

지금은 출제자이기 때문에 문항 출제를 위해 하버마스과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하버마스 관련 개념들은 크게 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1. 만장일치의 동의
- 2. 담론장 관련 개념

1번은 롤스와 의 공통점으로 암기해 두시고, 2번 같은 경우는 기출 문항과 EBS 연계 교재를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에 단독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상가 중 한명입니다.)

ㄱ 선지를 보시면, 위의 개념 중 2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상호 이해를 당연히 지향해야 담론이 가능하니까요.

ㄴ 선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출 문항과 연계 교재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오류 가능성이 없는 주장만 담론에 부칠 수 있다고 한다면 담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오류 가능성이 없는 완전무결한 주장이니까요.

ㄷ 선지도 2번 관련 내용인데, 상식적인 측면에서 처리 가능한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류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발화한 참가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주장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면, ㄱ 선지의 내용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ㄹ 선지가 1번입니다. (이건 외워둡시다.)

저의 하버마스 관련 사고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론 옹호 ->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인 토론(+ 기출 문제와 연계 교재에서 학습한 하버마스 관련 지식), 만장일치로 타당한 규범 도출!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 례>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많은 단골손님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 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②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 ③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 ④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 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번 문항입니다.

제시문은 뭐... 크게 할 말이 없네요. 기출 문항들이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다면, 칸트임을 바로 눈치챌 수 있고, 사실 생윤 고인물 같은 경우는 '의무'라는 키워드만 보고 옆에 빈칸에다가 '칸'이라고 적고 갈거 같네요. 그래도 제시문 내용을 챙겨가자면, '의무와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의무와 맞는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에 비해 더 큰 범주의 내용이겠네요.

칸트의 입장에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의무와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다.'라는 선지는 칸트의 핵심 오답 선지가 됩니다. 이 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서양 윤리 사상에 등장하는 칸트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벌 단원 혹은 자연과 윤리 단원에 등장하는 칸트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핵심 선지들만 보고 넘어갑시다.

1번 :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칸트가 아니라 '덕 윤리' 사상가가 조언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걸 칸트가 동의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도덕 강조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칸트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선하다고 보았고, 의무 의식, 선의지와 같은 도덕적 행위의 근원적인 동기가 되는 것들은 존엄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것입니다. 결국 후천적 실천으로 얻어지는 덕이 아니라 선천적인 도덕적 요소가 강조되는 것이죠.

4번 : 왜 틀린 내용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3번 :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거 아니야?" 그렇지만 선지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봅시다. '모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익 증진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행위입니다. 도덕을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므로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겠죠?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대도(大道)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賢]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만드지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다.

을: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꺼내서 늘어놓는 일이 없다.

<보 기>

ㄱ. 갑: 인(仁)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행해야 한다.
 ㄴ. 갑: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ㄷ. 을: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입니다.

동양 윤리 사상 문항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하에서는 크게 유교, 불교, 도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ㄱ 선지가 묻고 있는 개념이 목자의 겸애 개념이라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목자의 예술관을 학습하면서 목가의 기본적인 입장을 파악하기는 하지만,

동양 윤리 사상 파트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15개정 교육과정 이후 평가원 단위에서는 처음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수능에 이러한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그런데 아무리 목자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결국 동양 윤리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은 유,불,도 인데, 목자 개념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자와 크게 대비되는 유교와 관련있는 개념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별애' 개념과 대비되는 목자의 '겸애' 개념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수능에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별애 개념이 확장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 자기 가족부터 사랑이 시작되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핵심 선지들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ㄴ 선지 : 대동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사실 제시문 독해입니다. 제시문 잘 살펴보세요!)

ㄹ 선지 :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은 유,불,도 모두가 부정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유,불,도 모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정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예법은 도가가 혐오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니깐요!

+ 6월 모의평가에는 유교와 도가, 9월 모의평가에서는 불교와 도가가 나왔는데, 도가가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이유는 다른 동양 사상과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도가 사상만의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수능에는 모든 동양 사상이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수준까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법은 각 동양 사상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 ① 갑: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② 갑: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입니다. 분배 정의 단원 문항인데, 1번 선지가 말이 많았죠. 갑은 정의의 일차적인 주제와 원초적 입장을 언급하는 롤스, 을은 소유 권리를 언급하는 노직이네요. (+ 수능에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관련된 지식들을 묻는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9월 모두 제시문에서는 원초적 입장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선지에는 올해 단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어서요. 준비해 둥시다.)

갑, 을 관련 문항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갑, 을 중 자신 있는 사상가를 먼저 풀고, 갑, 을의 공통 입장을 묻고 있는 5번 선지로 달려간 다음(자신 있는 사상가의 파트에서 오답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나머지 사상가의 개념을 묻는 선지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서대로 풀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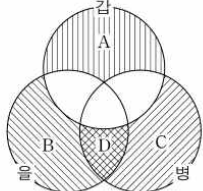
핵심 선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1번 : 이 선지는 그냥 ‘**더 큰 자유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 가능.**’의 논리로 해결하는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천부적 자산은 개인의 것, 천부적 자산의 분포는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자신의 것인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기본권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기본권도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 가능하잖아요?

3번 : ‘**~될(할)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가능성의 선지와 단언하는 선지의 구분**입니다. 이 선지를 ‘교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물어볼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 사상가인데,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이 교정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면, 노직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노직 또한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상가이고, 노동을 통한 소유물이 이동하는 과정이 취득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양도 과정)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겠네요.

5번 : 노직이 사실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지만,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평등**은 존재하겠죠.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p> <p>을: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p> <p>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기>

ㄱ.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ㄴ. B: 인간은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ㄷ. C: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ㄹ. D: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입니다.

자연과 윤리 단원이 2021학년도 수능 이후로 계속해서 킬러 단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킬러 단원이었지만, 최근에 다른 단원들과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 만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출제 요소들이 많고 수험생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벤 다이어그램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유형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알파벳부터 처리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단독 개념으로 묻는 문항은 다른 사상가들이 이 선지에 대해 부정의 입장을 취하는 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긍정의 입장을 취하는 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정오 판단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사고의 깊이가 얕음?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핵심 선지들을 보고 넘어갈게요!

+ 수능에도 자연과 윤리 단원은 벤 다이어그램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칸트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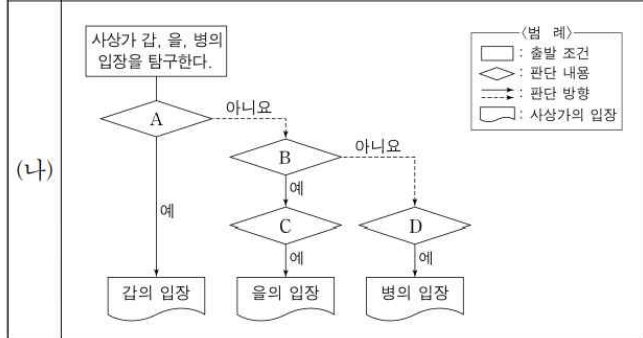
ㄱ :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은 인간 외 존재들을 인간을 위한 복리 방편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겠네요. 수단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 : 레건이 동의할 만한 진술이 아닙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의 자격을 지닌 개체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의무론의 입장에서 규정했지, 동물 종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체론 vs 개체론 개념을 묻고 있는 선지였습니다.

ㄹ : '~수 있다.' 또 가능성의 선지입니다. 가능성의 선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1가지라도 떠올릴 수 있으면 참입니다. 동물이 권리를 지닌다? 그러면 동물 중심주의 이상의 사상가들이면 모두 동의할 만한 내용이겠네요. ㄷ 선지와 묻고 있는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선지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 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
 병: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 기>
 ㄱ. A: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ㄴ. B: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ㄷ. C: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ㄹ. D: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입니다.

순서도 문항을 처리하는 방법은 묻고 있는 사상가의 수가 적은 순서대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D --> C --> B --> A 의 순서대로)

해외 원조 단원에서 순서도 유형이 출제되어서 살짝 놀랐습니다. 3명을 묻는 순서도는 해외 원조 단원에서 노직을 출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사실 해외 원조 단원에서 노직이 어렵게 출제되기는 살짝 무리잖아요? 보통 롤스나 싱어에서 고난도 선지가 출제되는데, 6월 모의평가의 실험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핵심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을 제시문(롤스)의 마지막 문장은 꼭 알고 넘어가 주세요. 해외 원조 단원에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EX. 차등의 원칙)

ㄱ : 노직의 원조 개념을 떠올려봅시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노직도 개인의 도덕적인 의지가 동기가 되어 빈민들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원조는 긍정하잖아요? '모든' 원조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ㄴ : 이 선지가 롤스의 제시문과 연결되는 선지입니다. 롤스는 **해외 원조 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단지 윤리적 의무에 따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인데,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조정한다는 것은 국가들 간의 자원 분포의 불균등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아니죠.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니깐요. 만약 이 선지가 맞다고 하면 원조 대상국을 최소 수혜자로 본다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ㄷ :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 중단 시점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ㄹ : 공리주의 기본.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 ③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④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입니다.

제시문은 특별히 가져갈 만한 내용은 없지만, 제시문의 마지막 줄을 잘 확인해 보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정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 개인의 이익도 아니고, 집단의 이익도 아닙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속한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 불복종의 결과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증진될 수는 있습니다.**(꼭 알아주세요.)

2번 : **시민 불복종과 시민 혁명을 구분**하는 선지입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을 생각해볼까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안에서, 부정의한 일부 법률과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공개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부정의한 사회, 즉 정치 체제부터 잘못된 사회 안의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을 시행해야 할까요? 분명히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위해 행해지는 행위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시민 혁명을 전개해야 하겠죠.

3번 : **헌법과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부정의한 일부 법률이죠?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4번 : 체제 변혁 x

5번 : ‘~수 있다(없다)’의 선지입니다. 또 다시 등장했네요.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에서도 가능성을 묻는 선지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개인의 양심(소로의 입장)이면 안되겠지만, 개인이 따르는 공유된 정의관과 개인의 양심이 일치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 안전 보장, 번영 등으로 다양해도, 그들이 국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을: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 ① 갑: 권력 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 ② 갑: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③ 을: 영구 평화를 위해 정치 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
- ④ 을: 영구 평화는 공고한 평화 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세계 공화국을 수립하여 영구적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묻고 있는 문항이네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답 선지는 현실주의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험생들의 학습 방향이 이상주의와 칸트의 영구 평화론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인식한 평가원의 출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지들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정치는 권력 투쟁의 역사이잖아요?

2번 : 국가 간 분쟁을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국가(혹은 국가를 통치하는 세력)가 선한 존재이고, 분쟁이 사소한 오해를 통해 발생하여야 이러한 도덕적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성악설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을 통해 다툼을 중단하는 것이죠.

3번 : 칸트의 영구 평화론 조항들 중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 체제는 공화정.’

4번 : ‘만’이라는 보조사 때문에 오답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5번 : 범국가적 세계 정부(공화국)은 칸트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되게 맞는 말 같죠?)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p> <p>을: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p> <p>병: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p>
(나)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입니다.

(형벌 단원이 6월 모의평가에서는 매우 어렵게, 9월 모의평가에서는 매우 쉽게 출제되어서, 수능에는 중간 난이도 혹은 6월 모의평가 급의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9월 모의평가에도 칸트, 루소, 베카리아 세트가 출제되었는데,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으로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거라...)

삼자 비판 문제는 저는 순서대로 풀었는데, 자신있는 사상가들을 먼저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 사형 단원에 출제되는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2번 : 루소의 표현 중 이렇게 있죠. "살인범은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서 죽는다."

3번 : well-made 오답 선지입니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공리주의** 사상가이잖아요?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개인은 국가에게 생명 박탈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베카리아는 살인이 범죄 억제력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떨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이잖아요. 범죄 억제력, 즉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4번 :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권의 기초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권의 기초**를 생각해 봅시다. 칸트는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이고,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국가가 자산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형벌 집행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칸트가 사회 계약론자이나? 라는 내용에 관계없이, 칸트는 형벌권의 기초를 사회 계약의 내용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점만 알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한 수준의 공부**는 **생활과 윤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번 : 이것도 well-made인데, 사형제 **존폐** 의 근거를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론에서 찾고 있죠!

1.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의 목적은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② (가)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를 필요로 한다.
③ (나)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④ (다)는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⑤ (다)는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항입니다.

앞선 윤리학의 분류 단위 문항을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6월,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통해 출제될 수 있는 윤리학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 어떤 윤리학이 출제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수능의 교훈적 특성 상 실천 규범 윤리학은 아마 반드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공부해 두세요!)

문항 분석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선지 : 특이한 선지입니다. 수능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가 묻고 있는 개념은 알고 가야 하겠죠?

(가)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고, (다)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잖아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로 삼는 것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정립한 도덕적 규범(이론)이겠죠.

5번 선지 :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을 묻는 선지같네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학제적 성격은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윤리학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 있다.'식의 선지네요. 평가원이 새로운 선지를 출제하고자 할 때, 가능성의 선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내용을 전달하고는 합니다.)

2.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를 연기(緣起)라 한다.
(나)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보 기>
ㄱ. (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ㄴ. (가):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ㄷ. (나):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道)에 따라야 한다.
ㄹ. (가), (나): 인의(仁義)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 문항입니다.

불교와 도가가 출제되었네요. 6월 모의평가에는 유교와 도가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능에는 어떤 동양 윤리 사상이 출제되어도 이상함이 없습니다. 골고루 잘 학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방법은 6월 모의평가 동양 윤리 사상 파트 참고) 선지들 보고 넘어갑시다. (개인적으로는 유가와 불교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 ㄱ : 많은 수험생분들이 '고정불변'이라는 워딩을 보고 ㄱ 선지의 정오 판단을 하였는데, 좋습니다. 좋으나, 그 뒤에 실체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맞는 말로 고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상'이 되겠네요. 그냥 실체x 실상o 라고 외워주세요.
- ㄴ : 불교 기본 입장.
- ㄷ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양 윤리 사상 단원 문항의 ㄹ 선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 ㄹ : 유교의 입장입니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그 행위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하였을 때,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① 갑: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 ② 갑: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 ③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이다.
- ④ 을: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입니다.

난이도가 높았는데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생각해볼 만한 선지들이 많았는데, 수험생들이 생운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는 칸트 단독 문항, 9월에는 칸트와 벤담이 출제되었으므로 수능에는 출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1. 칸트 단독 or 칸트&공리주의
- 2. 덕 윤리의 갑작스러운 출제

1번 같은 경우는 칸트에 관한 학습이 잘 되어있으면 큰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덕 윤리 파트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칸트 제시문을 살펴보면 '결과와는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오로지 행위의 동기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 '~수 있다.'의 선지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독해 문항이죠? 결과와는 상관없으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의 산출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행위가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이죠.

4번 :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쾌락의 종류가 무엇이든지간에,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과 감각적 쾌락 모두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벤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벤담이 쾌락의 종류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쾌락도 양적 계산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것이지, 쾌락의 종류가 단일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활용해서 수능이 출제될지는 모르겠으나, 심화 학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나오면 좋죠))

5번 : 윤리와 사상에서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함께 물어볼 때 자주 출제되었던 선지입니다. (보편적 원칙 = 보편적 도덕 원리)

4.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과학 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이다.

- ①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 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 기술로 해결 가능함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 문항입니다.

갑, 을 유형으로 출제되었지만, 결국에는 요나스가 핵심인 문항입니다.

요나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은 크게 3가지인데,

- 1. 비호혜적 책임 (not 주인)
- 2. 책임의 주체는 현세대 인류만
- 3. 공포 > 희망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은 기출 문항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모든 개념을 이 자료에 담을 수는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항을 학습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요나스 관련 문항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기출 수준 + 올해 9평 출제 내용만 알아두어도 수능에서 틀리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정답 선지는 2번(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의 확장 포인트인데, 책임의 주체 개념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책임의 대상 개념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요나스가 생각하는 책임의 대상은 **자연 전체와 미래 세대 인류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은, 요나스가 책임 윤리를 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류 존속**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스의 입장에서 자연 환경의 보호와 인류 존속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인류 존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여야 한다.
- ㄴ.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 ㄷ.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문항의 변형 문제 수준인데, 훨씬 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를 국가 단원에서 함께 물어본다면, 9월 정도의 난이도 혹은 이것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킬러 단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킬러를 낼 수 있는 단원이 워낙 많아서...)

선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ㄱ : **가족 공동체 의식**... 로크가 할 만한 말은 아니죠? 앞서 설명한 내용 중 제가 로크의 인위적 성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성격을 기억하시나요? 가족은 자연적 성격에 가깝죠? 그리고 뒤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이 말은 로크가 동의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으나, 굳이 이런 내용을 로크가 부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사실 모든 국가 윤리 사상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깐요. 결국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로크의 입장에서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인위적인 산물이지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ㄴ : 로크의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

ㄷ : 정치적 본성 = 정치적 동물.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ㄹ :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겠죠?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독해하시면 됩니다.

+ 생활과 윤리 관련 행동영역인데, 낯설거나 당황스러운 선지들은 말 그대로 독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을: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케라 증진과 고통 감소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ㄴ. 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ㄷ. 을: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ㄹ. 갑, 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입니다.

해외 원조 문항에서 노직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식(롤스, 싱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으나... 무튼 수능에서도 해외 원조가 출제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노직은 안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6평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쉽게) 롤스 단독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싱어는 안 나오냐고요? 싱어가 단독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싱어는 해외 원조 단원에서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공리주의 원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싱어가 해외 원조 단독 문항으로 나오면... 저의 안목을 믿어주세요! 안 나올 겁니다.) 선지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가 좋습니다.)

ㄱ : 롤스가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를 떠올려 봅시다. 롤스는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해외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겠죠?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ㄴ : '~할 수 있다'의 변형 선지인 '~경우가 있다.' 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지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시 혹은 반례를 하나만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원조 주체의 경제적 상황이 원조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빈곤한 사람이 여럿이지만 빈곤한 순서에 따라 원조를 할 경우에 빈곤한 모두에게 원조할 수 없는 경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너무나도 좋은 선지입니다.

ㄷ : 싱어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보았죠. 도덕적 구속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ㄹ :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x입니다. 롤스는 원조 시 국가의 정치 문화 상황이 중요하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고통받는 사회라면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노동이 생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사회는 자신의 것밖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고 쓸 수 있게 된다.</p> <p>을: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불의의 교정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p> <p>병: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들은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른다.</p>
(나)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보 기>

ㄱ. A: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ㄴ. B: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ㄷ. C: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ㄹ. D: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입니다.

제가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될지 9평 이전에 가볍게 예측한 내용이 있는데, 적중한 문항입니다.

을, 병은 롤스 노직으로 나오고, 갑에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왈처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마르크스가 출제되었네요.

수능에는 6월 모의평가의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3명 순서도 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선지들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ㄱ : 마르크스의 **국가 소멸론**을 떠올려주세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그 결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반란이 시작되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 상태로 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계급이 소멸된 공산 사회로 도래하게 됩니다. 계급과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배인 '필요에 따른 분배'는 국가가 없는 공산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롤스와 노직은 가장 바람직한 분배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를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ㄴ : 노직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소유권을 지니는지**를 떠올렸다면, '만'이라는 보조사에서 오답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선지입니다. 노직은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의 노동은 아니지만 정당한 양도의 과정을 거쳐 나에게 타인의 소유물이 이전된다면, 이 또한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ㄷ : 6월 모의평가 변형 선지입니다. 노직은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ㄹ :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권이죠? 말 그대로 자기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기본권이 아니면, 침략과 약탈의 발생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균등히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 6월 9월 모두 제시문에서 원초적 입장이 언급되었는데 선지로 원초적 입장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무조건 원초적 입장이 출제될 것입니다.**

+ 노직의 입장에서, 원래 나의 소유물이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소유물이 이전되었고, 제시문에 언급된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나에게 다시 소유물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려 한다.

을: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氣)가 드러나고, 그 기가 변화하여 형체를 이루며, 다시 이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긴다. 생명은 다시 한 번 변화해서 죽음으로 돌아간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 ③ 을: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 ④ 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仁)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는 뇌사와 심폐사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고,

9월에는 죽음에 관련된 사상가의 입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출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평가원의 노력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골고루 공부해 두시는게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9월처럼 사상가의 입장을 묻는 문항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번 : 불교의 '일체개교' 사상을 떠올리셨으면 됩니다.(윤리와 사상) <- 이걸 너무 지엽적이고요, 불교의 입장에서 생,로,병,사 모두 고통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갑은 유학 사상가죠? 오답입니다. 수능에 불교의 죽음관이 출제될 수도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2번 : 도가의 입장입니다. 유독 올해 동양 사상 파트에서는 다른 사상을 출제하여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많아보입니다.

3번 : 정답입니다.

4번 : 인, 인위... 그냥 유교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도가가 혐오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도가는 인위적인 도덕을 싫어하니깐요.

5번 : 불교의 입장입니다. 6월 모의평가 동양 윤리 사상 문항과 9월 모의평가 동양 윤리 사상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오답 제작 방식입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가야 한다. 모든 입법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오는 공화 정체에 기초해야만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맹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호란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 ①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③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 ④ 국가 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 실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 ⑤ 정치 체제의 개선이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현실주의 사상가와 함께 물어보았고, 9월 모의평가에는 칸트 단독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는? 가능한 상황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저의 예상은 **칸트와 갈통이 함께 출제되는 것**입니다.

(갈통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니부어, 알처와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인지...)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죠! 자주 출제되었던 칸트의 평화 관련 오답 선지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 기구, 국제 연맹 같은 단체들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하는 것은 오직 국가만이 그래야 합니다.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세력 다툼으로 인해 영구 평화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 평화 조약이 영구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죠...?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내용을 변형한 선지입니다.

4번 : 국가 간 분쟁의 해소는 영원한 평화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5번 :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평화 실현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뜻이죠? 정치 체제의 개선을 통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평화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개선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p> <p>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중 차별주의적 태도이다.</p> <p>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대지 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p>
(나)	

<보 기>

ㄱ. A: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ㄴ. B: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ㄷ. C: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ㄹ. D: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입니다.
 말이 가장 많았던 문항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 2가지입니다.

1. 테일러가 출제되지 않았다.
2. ㄷ 선지를 해설하는 방법

선지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ㄱ :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칸트와 싱어에 앞서 레오폴드를 떠올리셨어야 합니다. 레오폴드는 대지를 경제적인 관점과 함께 심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하죠. 레오폴드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x입니다.
- ㄴ :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는 사상가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성, 선의지 등을 강조하며 이를 보유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싱어나 레오폴드는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들(사상가마다 상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죠.
- ㄷ : 존속할 권리라는 표현이 레오폴드의 원전에 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원전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생활과 윤리 출제진들이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깐 존속할 권리라는 표현을 정말 말 그대로 독해해보는 겁니다. 존재가 지속할 권리. 말 그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죠.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 즉 인간과 일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상가는 싱어와 레오폴드입니다. 그러면 레오폴드의 전체론과 이 내용이 양립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지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존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 등장하면 말 그대로 해석하여 쉽게 쉽게 넘어가는 생활과 윤리 느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ㄹ :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 칸트는 뭐 당연히 되겠죠?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니깐요. 싱어는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동물에게 해를 끼쳤는데 전체의 공리가 증진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니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겠죠. 레오폴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생명 공동체 전체의 온전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이겠네요.

17.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 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ㄴ. 갑: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ㄹ 선지가 이슈죠. 나머지 선지들은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6월에는 롤스 단독 문항이 출제되었고, 9월에는 롤스가 싱어와 함께 출제되었으니깐,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롤스와 싱어의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개념들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로는요? 소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소로에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적어드겠습니다.

1. 양심(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이 준법 의무에 우선
2. 즉시 불복종(not 최후의 수단), 폭력 사용 가능

이 두 가지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선지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ㄱ : 외워도 괜찮습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정의내리는 것이 애매하고,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 ㄴ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의 2번 선지의 변형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시민 혁명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는 시민 혁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ㄷ :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고, ㄹ 자리에 출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지입니다.
- ㄹ : 싱어는 당연히 o겠죠. 공리주의 사상가이니깐요! 그런데 롤스는...? 수능특강에서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설명할 때,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 불복종이 실패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되지 않을까요? 산술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60%라면 실패 가능성은 40%인데,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나머지 가능성도 고려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실패할 가능성, 즉 해석에 따라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도 고려되는 것이죠. 또한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 항상 성공한다고 한다면, 시민 불복종을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할 이유 또한 없지 않을까요? 무조건 성공해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0%로 수렴한다고 하면, 합법적인 수단의 시도를 선행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실패했을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理性)을 통해 명확해진다.

- ①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 ③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④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정당하다.
- ⑤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입니다.

보수주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한 문항이었죠?

EBS 수능완성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한 칸트의 입장입니다.

(물론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중도, 자유주의의 입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한 사람들 간에만 성적 관계가 가능, 이 사람들은 서로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출산과 무관)
2.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적 관계의 정당화 불가능.

보수, 자유주의가 짝뿔된 느낌의 사상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특이한 내용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만 알아도 문제 풀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지들 확인만 하겠습니다.

1번 :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죠. 결혼 이전의 당연한 단계이니깐요. 어떤 사상가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2번 : 정답입니다.

3번 : 결혼해야 합니다.

4번 : 결혼해야 합니다.

5번 : 출산과 무관합니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다.</p> <p>을: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p> <p>병: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고이다.</p>
(나)	

- ① A, C: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옴을 간과한다.
- ② B: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③ D: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E: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⑤ F: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입니다.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3자 비판 문항이고,
 사상가도 칸트, 루소, 베카리아로 동일합니다.
 수능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선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 형벌이 주는 공포가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종신 노역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상가가 베카리아입니다.

2번 : 베카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베카리아는 애초에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처벌을 통해 다른 시민 구성원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3번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선지였던 선지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4번 :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상가는 루소와 칸트이지만, 사형을 시행하는 목적을 시민들의 생명 보존으로 보는 루소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보는 칸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선지입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5번 : 빈출 오답 선지입니다. 처벌 의욕 X 처벌 받을 행위 의욕 O